제 1 장

일상으로의 회복
– 코로나19 대응활동

제1절 경찰청 코로나19 대응체계 및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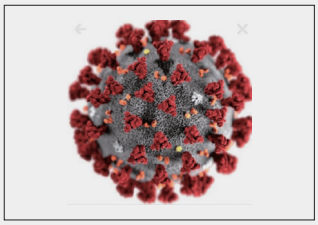
제2절 경찰청 코로나19 대응 주요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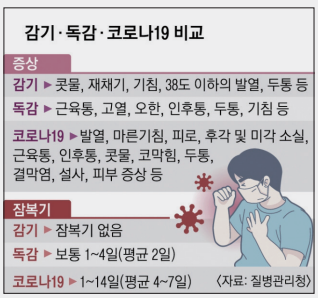
제1절

경찰청 코로나19 대응 체계 및 역할

[그림 1-1] 'SARS-CoV-2' 바이러스 모형



[그림 1-2] 코로나19 증상



1. 코로나19 개요

가. 코로나19의 정의와 특징

1) 정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는 '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으로 2019년 12월 12일(추정)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 발생한 이후 중국 전역과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WHO는 발병 후 몇 주가 지난 2020년 1월 9일에 이르러 폐렴의 원인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임을 밝혀냈다.

국제바이러스분류위원회는 2020년 2월11일, 이 새로운 병원체 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novel corona virus disease)의 명칭을 Coronavirus disease-2019(약어 COVID-19)로 정하였다. 여기에서 COVID-19는 코로나의 'CO', 바이러스의 'VI', 질병의 'D', 감염증이 처음 보고된 2019년의 '19'를 의미한다. 우리 정부도 2020년 2월 12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

2) 특징

코로나19의 임상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한데 일부 환자는 매우 경한 증상을 보이거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환자의 약 80%는 경증, 14%는 중증, 5%는 치명적이며 환자의 중증도는 고령과 기저질환 유무와 관련이 있다.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 · 미각 소실 등이 있으며,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 구토 ·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에 따른 합병증으로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정맥혈전색전증, 심혈관계 합병증(심근염 · 심부전 등), 급성 신장 · 간 손상, 신경계합병증(의식장애 · 경련 등) 등이 있다.

나. 코로나19 발생추이 및 경과

2020년 12월 31일 24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61,769명, 이 중에서 국내 발생이 56,359명이고 해외유입이 5,41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18,714명, 경기 13,628명, 대구 7,736명, 인천 2,747명 등 수도권과 대구 지역에 확진자가 가장 많았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누적 5,410명이며 45.2%에 해당하는 2,448명이 검역 단계에서 확진 사실이 확인되었고 2,962명은 지역사회 감염이 해외유입으로 확인된 사례였다. 유입국가는 중국 유입 확진자가 34명, 중국 외 아시아는 2,547명, 아메리카 1,665명, 유럽 969명 등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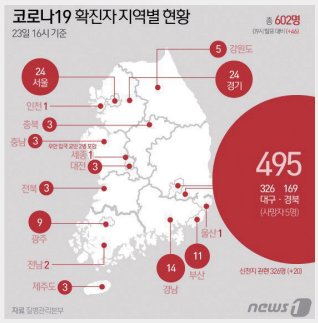
같은 기간 국내 누적 사망자는 917명으로 치명률은 전 세계 치명률 2.25%보다 0.77%P 낮은 1.48%이었다. 사망자는 남성이 459명, 여성이 458명으로 성별 유의미한 격차는 없었으며,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507명, 70대 259명, 60대 110명, 50대 30명, 49세 이하가 총 11명으로 주로 고령층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표 1-1] 코로나19 국내 지역발생 일일 신규확진자 추이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자료 : 질병관리청

[그림 1-3] '20. 2. 23. 지역별 확진자 현황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 20. 이후 1. 31.까지 누적 확진자는 12명으로 어느 정도 관리가 되었으나, 2. 18.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확인하고, 2. 20. 청도 대남병원에서 국내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

[그림 1-4] WHO 사무총장 '팬데믹 선언(3.11.)'



[그림 1-5] 광복절 집회관리



[그림 1-6] '20. 11. 20. 중수본 정례브리핑



면서 2. 23. 감염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2월 한 달 동안 신규 발생한 확진자는 3,514명이었으며, 2. 29.에는 일일 최다인 909명이 하루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WHO는 3. 11. 코로나19의 전 세계 대유행(팬데믹)을 선포하였다. 이는 1968년 홍콩독감,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세 번째 팬데믹 선포였다. 국내에서는 대구 신천지 집단감염에서 시작된 확산세 차단을 위해 3. 22.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차츰 안정세로 접어들어 5. 6.부터는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5월과 6월에도 이태원 클럽,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산발적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7월에는 수도권, 충청권, 광주 등에서 방문판매, 친목모임,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였다.

8월에는 서울에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코로나19 2차 유행이라고 불리는 대대적 확산세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8. 16. 서울 · 경기 지역, 8. 19. 인천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여 대면예배 금지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는 8. 2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전국 확대, 8. 30. 음식점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고강도 거리두기의 효과로 9월부터는 확산세가 둔화되었으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많고, 산발적인 소규모 · 중규모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일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이후 10. 11. 중앙재난대책 본부는 최근 2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관리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미만으로 떨어졌음을 감안하여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하였다.

이후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일일 100명 내외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던 중 11. 14. 20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여 9. 2. 267명 이후 처음으로 다시 200명대에 진입하였다. 11. 20.에는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전문학술단체들이 성명을 통해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가 경과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3차 유행이 공식화되었다. 정부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시 · 군 · 구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였지만, 11. 26.에는 약 8개월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00명

[그림 1-7] '20. 12. 13.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



을 넘고, 12. 4. 600명을 넘기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었다. 12. 12.에는 신규 확진자가 950명으로 지난 2. 29. 909명을 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12. 13.에는 1,000명을 돌파하였다. 정부는 12. 13. 대통령 주재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익명 · 무료 검사를 통해 확진자 조기 발견을 도모하는 한편,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경찰과 군 인력을 보건소에 긴급 배치하여 역학조사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 12. 23.부터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원천 금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12. 25. 신규 확진자 1,241명을 기록하는 등 연말까지 매일 천 명 내외의 확진자가 신규 발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졌다.

2. 정부 코로나19 대응 체계

가. 개요

정부는 1. 20. 국내 최초 확진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하여 환자감시체계와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를 강화하였다. 1. 27. 국내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가동하고 부처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다. 이후 대구 신천지 교회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2. 23.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총력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높은 감염력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과거 메르스 대응절차에 준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발생 양상을 조기에 파악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환자와 접촉자를 관리하는 3T(Test - Trace - Treat, 검사-추적-치료)를 기본 대응방향으로

삼았다. 아울러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개인위생 교육 · 홍보 강화, 지자체 및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지역사회 방역역량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나.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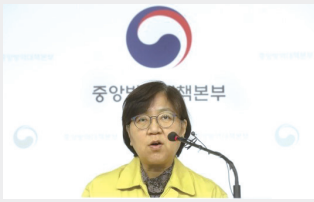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분된다. 방역당국은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감염병의 종류, 국내 · 외 유입 및 발생 상황, 확산 규모 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며, 위기경보 단계에 따라 중앙 · 지방 차원의 전담조직을 가동한다.

'관심' 단계는 해외에 신종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국내에 원인불명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 발령하며,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감염병 발생 지역의 지자체는 지역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대응한다. '주의' 단계는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국내 발생 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에서 발령하며, 이때는 질병관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조직인 '중앙방역대책본부(약칭 : 방대본)'를 가동하고 지자체는 모든 광역자치단체와 감염병 발생 기초자치단체에 지역방역대책반을 편성하여 감염병 감시체계와 현장 방역 인프라를 가동한다.

'경계' 단계는 해외 신종감염병이 국내 유입되어 제한적으로 전파되거나 국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경우에 발령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 ·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지역방역대책반을 확대 운영하고 감염병이 발생한 지자체는 단체장을 본부장으로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을 구성한다.

'심각' 단계는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이 시작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발동하며 이때부터는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 총력대응이 이뤄진다. 전국적 재난 상황의 관리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설치되어 국무총리 또는 행안부장관이 본부장으로서 각 부처와 지자체의 대응활동을 총괄 · 조정한다. 지난 2. 23.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함께 설치된 중대본은 국무총리가 본부장이 되고, 복지부장관이 1차장으로서 감염병 위기상황을 관리하고, 행안부장관은 2차장으로서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체계 운영을 지원하였다..

[그림 1–8]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방대본은 '주의' 단계에 가동한다.



[그림 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3. 경찰 코로나19 대응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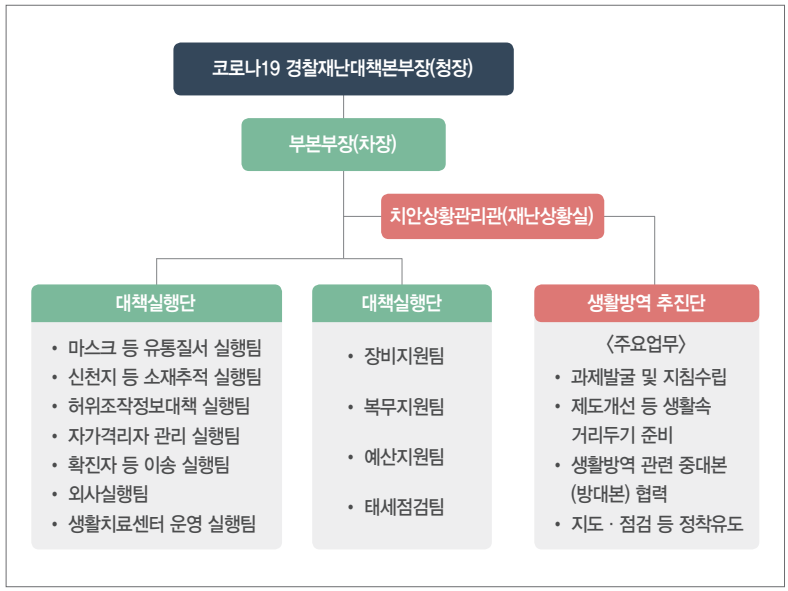
가. 개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 27. 경찰청에 재난상황실(실장 : 위기관리센터장)을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였다.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해 부처별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면서 2. 4.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치안상황관리관을 간사, 관련 기능 국장을 팀원으로 하는 '경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설치하여 기능별 주요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안건 등 논의 필요사항을 협의하였다. 동시에 치안상황관리관을 팀장, 국 · 관별 주무과장을 팀원으로 하는 실무TF를 구성하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가동한 TF를 중심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경찰 대응의 통합적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23.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경찰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2. 25.부터 경찰청 재난상황실장을 치안상황관리관으로 격상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2. 27. 기존 '코로나19 대응 TF'를 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경찰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하였다. 본부장은 매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 경찰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코로나19 관련 경찰 조치사항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시 · 도경찰청과 경찰서에도 각각 관서장급의 대응조직(대책본부)을 설치하고 재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상황에 총력 대응하였다.

코로나19 경찰재난대책본부는 치안상황관리관이 간사로서 본부장을 보좌하여 재난대책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담당하고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였다. 대책본부에는 대책실행단과 대책지원단을 두고, 대책실행단은 확진자 소재추적, 불법행위 대응, 자가격리자 관리 등 코로나19 대응활동의 실행을 담당하고, 대책지원단은 장비, 복무, 예산 등 대책실행단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표 1–2] 경찰재난대책본부 조직도



나. 경찰 코로나19 주요 대응체계

1) 비상근무 발령

2. 23.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에 따라 2. 24. 10시를 기해 전국 경찰관서에 비상근무를 발령하였다. 당시 대구 신천지교회와 경북 청도군 대남병원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을 고려하여, 대구경찰청과 소속 경찰서, 경북 청도경찰서에 '을호비상', 그밖에 경찰관서에는 '경계강화'를 발령하였다. 경북경찰청은 이후 경산, 칠곡, 봉화 등 인근 시 · 군으로 감염병이 확산되자 차례대로 해당 시 · 군 관할 경찰서의 비상등급을 상향 조정하였다.

3월 중순 이후 대구 ·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잦아들고 상황이 안정되면서 대구 · 경북청은 경찰청에 비상근무 하향 조정을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4. 6.부터 대구청과 경북청도경찰서의 비상등급을 하향조정하고, 이후에는 지역별 확진자 발생 및 방역관리 상황에 따라 각 시 · 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 관서별 비상등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그림 1-10] 제1회 코로나19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2)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

위기경보 '심각' 발령 이후, 엄중하고 급박한 코로나19 상황과 경찰의 총력대응 필요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하여 2. 24. 10시 제1회 전국 지휘부 코로나19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경찰청장 주재로 경찰청 차장, 국 · 관, 각 시 · 도경찰청장이 참석하고 전국 경찰서장이 시청하는 가운데 정부대책 및 경찰 조치방향을 설명하고, 국 · 관별 치안대책 발표, 대구 · 경북청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후에도 제21대 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광복절 집회, 명절 연휴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경찰청과 시 · 도경찰청의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개최하였다.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경찰의 방역대책 지원 방향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전개될 수 있었고, 각 시 · 도경찰청에서 추진한 우수사례가 전국으로 공유 · 확산될 수 있었다.

3) 생활방역추진단

3. 22.부터 시작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4. 19. 종료되고 4. 20.부터 5. 5.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절 계획이 시행되었다. 중대본은 5. 6.부터 적용할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준비하기 위해 부처별 '생활방역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경찰은 중대본의 요청에 따라 4. 22. '경찰청 생활방역추진단'을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경찰청 생활방역추진단은 치안상황관리관을 단장으로, 국 · 관별 서무 또는 주무과장을 구성원으로 설치하였다. 추진단은 회의를 통해 5. 6.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재개할 경찰업무를 정하고, 재개된 업무에 적용할 경찰업무지침 12종을 마련하였다. 또, 경찰수련원, 경찰박물관 등 소관 시설에 대한 방역계획도 수립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활방역추진단을 주요 방역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실무협의체로 운영하였다. 경찰청 생활방역추진단은 12. 31.까지 18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재개 · 중단할 업무와 그 시점 및 방법을 논의하여 「단계별 경찰업무 조정방안」 마련
- ▶ 경찰청 기능별 소관 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및 방역취약요소에 대한 대책 마련
- ▶ △순경공채시험 △형사법 능력 시험 △보안경과 역량평가 시험 등 경찰 주관 시험 실시 관련 방역대책 수립
- ▶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강화 △여름철 방역대책 지원 △경찰청 소관 시설별 위험도 평가 △방문판매사업장 집합제한 지원대책 등

제2절

경찰청 코로나19 대응 주요활동

1. 코로나19 발생 초기 대응활동(1~2월)

가. 상황 전반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는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집단 발생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이후 2020년 1월초부터 우한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환자가 증가하여, 2월초 중국 확진자는 2만 명에 육박하게 되었다.

정부는 1월 3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우한발 항공편 국내 입국자를 대상으로 발열 감시 및 검역을 강화하였다. 중국 우한시 방문 · 체류 후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는 격리조치 후 진단 검사를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1월 19일 중국 우한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 30대 여성이 1월 20일 오전 국내 첫 번째 확진 환자로 확정된 이후 소규모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여 2월 16일 09시 기준으로 국내 확진자는 24명까지 늘어났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중앙부처 · 지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조기발견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책반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였다.

1월 27일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여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 -19'로 정했으며, 중수본은 한글 표현을 '코로나19'로 명명하였다.

나. 경찰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 경찰청에 재난상황실(실

장 : 위기관리센터장)을 설치하여 24시간 대응체제를 가동하였다.

이후 2월 4일 경찰청 차장을 팀장으로 하고 치안상황관리관을 간사, 관련 기능 국장을 팀원으로 구성하는 '경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설치 · 운영하여 기능별 주요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 안건 등 논의 필요사항을 협의하였다.

2월 23일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2월 25일부터 경찰청 재난상황실장을 치안상황관리관으로 격상하였고, 2월 27일 '경찰청 코로나19 대응 TF'를 경찰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경찰재난대책본부'로 격상하였다.

아울러 시 · 도경찰청과 경찰서에도 각각 관서장급의 대응조직(대책본부)을 설치하고 재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여 코로나19 상황에 총력 대응하였다.

또한 1월 29일 코로나19 확진자 · 접촉자 대상 역학조사 시 신속한 확인 및 관리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접촉자 확인 TF에 경찰관 1명을 파견하였으며, 2월 3일 부처별 협력지원과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경찰관 2명을 파견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다. 우한 교민 입국(1·2·3차)

[그림 1-11] 우한 교민 이송



중국 우한 지역의 코로나19 확산과 지역봉쇄에 따라 우한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약 600명 중 희망자들이 귀국할 수 있도록 임시항공편을 운행하였다.

경찰청은 우한교민 지원대책반을 구성하였다. 치안상황관리관이 대책반장을 맡고 위기관리센터에서 교민 지원을 총괄하고, 정보화장비정책관이 차량과 무전기 등 장비를 지원했으며 교통국에서 에스코트를 맡았고 경비국은 공항 및 임시생활시설 주변 돌발상황에 대한 대비와 통제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김포공항에서 임시생활시설(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경기 이천 국방어학원)까지 교민 이송과 함께 이송 차량 에스코트팀을 운영하여 1월 31일 1차 귀국 시 교민 366명을 경찰버스 36대, 2월 1일 2차 귀국 시 교민 333명을 경찰버스 36대, 2월 12일 3차 귀국 시 교민 147명을 경찰버스 21대로 이동 지원하였다.

[표 1-3] 치안상황관리관 조직도



임시생활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관리하였다. 경찰청은 질서유지반을 맡고 총경급으로 반장을 지정하였다. 경찰인재개발원은 경찰 자체 시설인 만큼 교민들과 함께 2주간 숙식을 함께하며 내부질서 유지 등을 담당할 경찰관 10명을 지원하였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명을 지원하였다. 시설 주변으로는 진입로 주변 외곽경비 및 우발상황 대비를 위해 시설별 2개 중대와 대화경찰을 배치하였다.

[표 1-4] 중국(우한) 교민 이송 지원 현황

일자	대상 국가	귀국 인원	지원 내용
1.31	중국 (우한) 1차	366명	(교민이송) 경찰관 36명, 버스 36대 (에스코트) 경찰관 132명, 순찰차 44대, 오토바이 44대 (우발대비) 경찰관기동대 2개 중대 (시설경비) 경찰관 10명(인재개발원 내부 2, 외부 8),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
2.1	중국 (우한) 2차	333명	(교민이송) 경찰관 36명, 버스 36대 (에스코트) 경찰관 132명, 순찰차 44대, 오토바이 44대 (우발대비) 경찰관기동대 2개 중대 (시설경비) 경찰관 2명(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
2.12	중국 (우한) 3차	147명	(교민이송) 경찰관 21명, 버스 21대 (에스코트) 경찰관 56명, 순찰차 24대, 오토바이 8대 (시설경비) 경찰관 2명(이천 국방어학원), 경찰관기동대 1개 중대

라. 역학조사 지원

[그림 1–12] 소재불명자 소재 파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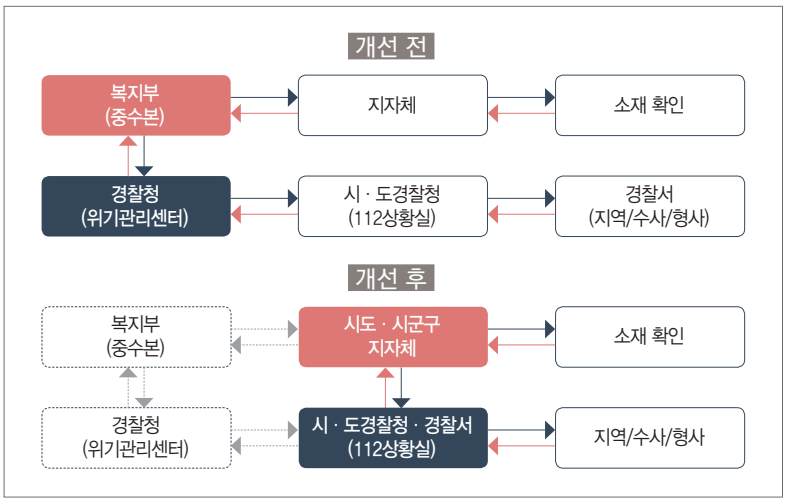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 · 접촉자의 소재와 이동 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경찰청에 소재확인 또는 위치정보 제공 협조요청을 하였다.

초기에는 지자체에서 1차 소재 파악 후 확인되지 않은 인원을 중수본에 전달하고, 중수본은 이를 취합해 경찰청에 보냈다. 이후 경찰청은 소재확인 지시를 시 · 도경찰청에 하달하고, 시 · 도경찰청은 경찰서에 하달하여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또한 소재확인이 이뤄지면 결과를 역으로 경찰서에서 시 · 도경찰청, 경찰청을 거쳐 중수본에 전달하고 중수본은 이를 다시 지자체에 전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역학조사가 지연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에 2월 5일 경찰청 위기관리센터는 '감염증 의심자 및 접촉자 소재추적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방역당국과 경찰청을 거치지 않고 지자체와 시 · 도경찰청 · 경찰서가 직접 연락하여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휴대폰 위치정보 제공 절차를 개선하였다.

[표 1–5] 치안상황관리관 조직도



마.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단속

[그림 1-13] 마스크 유통 질서 교란 행위 예방



1월 말,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마스크 등 관련 의료 물품의 품귀현상이 벌어졌다. 이에 편승하여 기존 판매가의 13배가 넘는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는 사례 등 시장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또한 기승하였다.

1)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 등 유통질서 확보

이에 정부는 1월 30일, 식약처 · 공정위 · 국세청 · 지자체 등과 함께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단속반을 편성, 마스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펼쳤다. 또한 2월 5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였다.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2.5) 주요 내용

- ▶ **적용대상 물품** :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 ▶ **적용대상자** : 생산자, 판매자
- ▶ **매점매석 판단기준** : 조사 당일 기준 19년 월평균 판매량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 ▶ **조사 · 단속** : 신고센터(식약처, 각 시도) 및 합동단속반 설치 · 운영

2월 27일 범정부 합동 단속반에 152명을 추가 지원하여 합동 점검을 전개하는 한편 2월 28일 특별단속팀을 편성(273개팀, 1,254명)하여 물가안정법 위반 및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관련 고시 불이행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였다.

주요 단속대상 및 유형

- ▶ 매점매석 및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불이행
- ▶ 공적판매처의 마스크 횡령 · 별도 창구판매 · 매점매석
- ▶ 1인당 구매 가능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 매집하여 재판매
- ▶ 생산시설과 판매처 간 유통과정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

그 결과 9월 15일 기준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 관련 총 284건 · 683명을 검거하였고 압수한 마스크 중 사용 가능한 1,511만여장을 공적 유통 조치하였다.

2) 마스크 판매사기 수사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된 2월 초, 사회적 혼란과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기승하기 시작했다. 2월 3일 기준으로 32건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도 각종 피해사례가 보도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2월 3일, 사이버 대책상황실 중심으로 마스크 판매사기 엄정 단속체계를 구축하였다. 사이버 대책상황실은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이 총괄하고 주간은 사이버수사 기능에서, 야간 및 휴일은 당직인 사이버대응팀에서 조치하였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 요원이 경찰청과 시 · 도경찰청에 총 49명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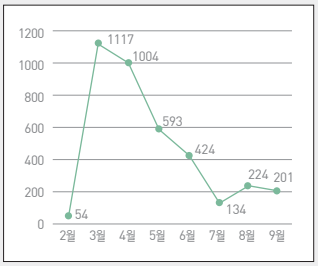
2월 말,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이 2월 23일 55건 → 2월 24일 128건 → 2월 25일 282건으로 가파르게 급증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2월 27일 '마스크 판매 사기 엄정 대응을 위한 단속 체계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다.

엄정 대응체계 구축 관련 세부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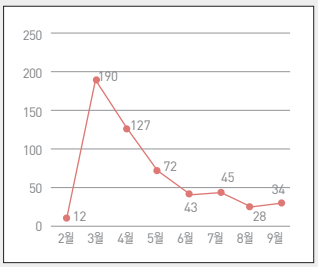
- ▶ **(책임관서 지정)** '마스크 값 선입금했더니 먹튀, 전국서 사기 피해자 속출(2.2 매일경제) 보도 관련, 접수한 2건(전주 덕진서 · 대전 대덕서)을 서울청 사이버수사대로 책임관서 지정
- ▶ **(사건 우선병합)** eCRM 접수 사건 32건 중 동일 계좌번호 사용 확인된 다수 사건(6건/13건)을 각 관서로 병합

코로나 발생 초기인 3월까지 마스크 판매사기가 급증했으나, 마스크 수급 상황이 호전되고 경찰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점차 안정화되었다.

[그림 1-14] 마스크판매사기 동향 (검거건수 기준)



[그림 1-15] 마스크판매사기 동향 (검거인원 기준)



2. 신천지 집단감염 등 1차 유행 대응 (3~7월)

가. 신천지發 대구·경북 중심 확산 시기(2.17.~3.8.)

1) 상황 전반

2월 17일 31번 환자 발생 이후, 2월 19일부터 대구 · 경북지역, 특히 신천지 대구교회 및 경북 청도 대남병원 등 일부 지역 및 집단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일 최고 1천명에 달하고 3월 8일 기준 누적 확진자의 수가 7천명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정부는 중앙-지방 간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가동하기 위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 병상관리TF팀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행안부, 환경부, 경찰청 등 10개 기관이 참여한 「범정부특별대책지원단」을 구성하여 대구(2.20.)와 경북 청도(2.22.)에 각각 파견하여 현장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2월 21일부터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국무총리 주재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1회에서 주 3회로 확대 실시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행안부장관으로 격상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모든 시 · 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시 · 도지사)'를 가동하도록 하여 심각 단계에 준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2월 23일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의 방역업무를 지원하며, 2차장 겸 범정부대책지원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맡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2월 24일 대구청과 경북 청도경찰서는 을호비상, 그 밖의 경찰관서는 경계강화를 발령하여 가용자원을 총 동원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한편 '코로나19 경찰 재난대책본부' 본부장을 경찰청 차장에서 경찰청장으로 격상하였다.

코로나19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 모든 유 · 초 · 중 ·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개학을 1주일 연기(3.2.→3.9.)하고, 전국

어린이집은 휴원(2.27~3.8)하였다. 추후 개학은 3월 23일, 어린이집 휴원도 3월 22일까지 재차 연기되었다.

또한 2월 26일 입원이나 격리조치 위반 시 벌칙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3월 3일 국무회의에서 모든 정부조직이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청와대를 포함 모든 부처가 24시간 긴급상황실 체제로 전환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게 되었다.

2) 경찰 코로나19 대응체계 개편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집단감염으로 2월 23일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2월 24일 제1차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실시하여 전국 경찰관서장 · 부서장과 위중하고 급박한 코로나19 상황을 공유하고 범정부 대응에 맞춰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였다. 2월 24일 대구청과 경북 청도 경찰서는 을호비상, 그 밖의 경찰관서는 경계강화를 발령하였다. 경북 지역의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경북 경산 · 칠곡서(2.26.), 봉화서(3.6.), 경주 · 안동서(3.10.)는 순차적으로 을호비상으로 격상되었다.

2월 25일 경찰청 재난상황실장을 치안상황관리관으로 격상하였으며, 2월 27일 경찰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경찰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하였고 3월 6일 본부장을 경찰청장으로 격상하였다. 시 · 도경찰청과 경찰서도 재난대응조직(시 · 도경찰청 · 경찰서 코로나19 경찰재난대책본부)을 각각 관서장급으로 격상하고 모든 시 · 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여 코로나19 상황에 총력 대응하였다.

또한 112신고 처리 등 최일선 치안현장을 담당하는 지역경찰의 치안 공백에 대비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였다. 확진자 발생 또는 접촉으로 지역경찰이 격리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인접 지구대 · 파출소, 경찰서, 기동순찰대를 차출하고 단계적으로 3교대 전환, 유연파출소형 운영, 2교대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 단계별 인력 조정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중심파출소를 선정하는 등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6] 신속대응팀 소재 확인 활동



3) 신속대응팀 편성, 신천지 교인 소재확인 및 수사

대구 · 경북 지역에서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은 신천지교회 명단 확보 · 전수조사 · 시설 출입 등 역학조사 지원 및 대규모 소재확인 등을 위한 신속대응팀을 편성 · 운영하게 되었다.

2월 26일 신속대응팀은 전국 18개 시 · 도경찰청, 255개 경찰서 등 273개 경찰관서에 편성하였다.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 · 형사 · 사이버 · 여청 · 정보 등 유관기능 경력 합동하여 총 5,753명을 1차 편성하였다. 이후 각급 지자체 등의 신천지 관련 소재불명자 소재확인 요청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3월 2일 신속대응팀 인원을 2,806명 증원하여 총 8,559명으로 확대하였다.

[표 1-6] 코로나19 신속대응팀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	경기북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559	2,162	288	500	467	592	147	382	45	713	233	306	168	307	334	836	451	388	240

신속대응팀은 각 시 · 도경찰청장 책임 하에 각 경찰관서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 · 형사 · 사이버 · 여청 · 정보 등 유관기능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주요 임무는 감염 의심자 소재확인 및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지원, 불법행위자 사법처리를 담당하였다.

신천지 교회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보건당국에서는 경찰에 검사 대상자 명단의 확보 및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지대본과 합동조사팀을 편성하여 경찰에서는 감염 의심자 소재확인 및 불법행위자 사법처리를 담당하였다.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이, 기타 행정조사는 보건당국 공무원을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신천지 교회 관계자 등이 합동조사팀의 정당한 출입 · 조사 등 행정조치를 거부하거나 폭행 · 협박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 및 제지하였고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 발생 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거짓진술 · 자료 제출 시에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하였다.

경찰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신천지 소재불명자 9,020명의 소재확인 요청을 받아 전원 확인 완료하였다.

4)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그림 1-17] 생활치료센터 질서유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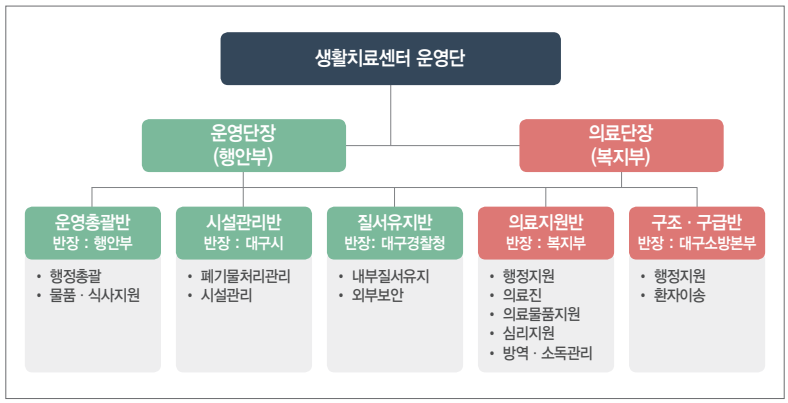
2월 말부터 대구 · 경북 신천지 신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병실이 한정된 상황에서 확진자의 경우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입원 치료토록 조치함에 따라 중증 환자가 입원할 병실이 부족했다. 당시 집단감염의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1,800명을 육박하기도 하였는데, 확진자의 80% 이상이 의학적 입원이 요구되지 않는 경증 환자임이 통계적으로 확인되며 확진자 치료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 치료체계를 재구축하며 중증 환자를 우선적으로 입원시키고 경증 환자를 별도로 격리하여 생활 및 치료에 대한 지원을 전담할 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3월 2일 최초의 생활치료센터인 대구 중앙교육연수원을 시작으로 3월 3일 경주 농협교육원, 3월 4일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등 대구 · 경북 중심에서 충청권 · 호남권 ·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순차 확대 운영되었다. 생활치료센터는 운영 중 수요가 없으면 일시적으로 운영 중단 후 재운영하기도 하였고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였다.

생활치료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일괄 입소시키기 위한 이송버스가 운영됐는데, 소방과 경찰에서 이를 지원하였다. 소방에서 구급차를 통해 확진자를 중간 집결지인 대구스타디움으로 이송시키면, 경찰에서 전국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는 버스에 대한 에스코트 및 교통통제를 지원하였다. 4월 말까지 경찰관 1,092명, 순찰차 543대, 오토바이 6대를 동원하여 4,281명의 환자를 이송지원하였다.

정부는 생활치료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 관리하기 위해 센터별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였다. 지원단은 부처별 6개 기관으로 구성되었고, 경찰청은 질서유지반에 편성되어 센터 내 · 외부 질서유지를 담당하였다.

[표 1-7] 생활치료센터 운영단 체계도(3.1. 대구 기준)



경찰청의 지원 인력 규모는 정부합동지원단과 협의를 통해 시설 · 수용 인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내부는 일시점 2~3명 정도였고, 외부는 일시점 2명에서 10명까지 시설별 여건에 따라 상이했다.

내부 근무자는 시설 내 상주하며 취약지 순찰이나 CCTV관제실 상황근무 등을 맡았으며 주로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였다. 외부 근무자는 시설 외곽에서 거점근무 또는 유동 순찰을 통해 우발상황 대비나 격리자 무단 이탈 예방을 담당하였고 주로 기동대나 관할 지역관서에서 담당하였다. 내 · 외부 근무자는 2주 단위로 교체하는 형태로 운영하였다.

3월 8일 기준, 충남 · 충북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10개의 생활치료센터가 운영되었고 총 2,187명 입소 정원 중 1,180명이 입소하였다.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따른 질서유지 경찰관 지원 지시(3.11.)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중 환자 40명 이상 수용 요청 시 : (내부) 2명 이상 배치 (외부) 관서장 판단 하 배치 규모 결정

▶ 중앙 · 광역 40명 이하 및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 사안별 협의 및 본청 보고 후 배치 여부 결정

5) 마스크 등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 운영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마스크 · 손소독제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마스크 등에 대한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규제하는 고시가 시행되었다.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우체국, 농협, 공영홈쇼핑, 전국 약국 등 공적판매처가 마스크 생산업체로부터 일일 생산량의 50%를 공급받아 국민들에게 제공하였다.

경찰에서는 2월 28일 마스크 수급 상황의 심각성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방침을 고려하여 국민이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마스크 유통질서 확보를 위한 특별단속팀을 편성(273개팀, 1,254명)하였다. 물가안정법 위반 및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관련 고시 불이행 등 마스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

주요 단속대상 및 유형은 △매점매석 및 마스크 등 긴급수급조정조치 불이행 △공적판매처(약국 등)의 마스크 횡령 · 별도 창구판매 · 매점매석 △1인당 구매 가능한 수량 이상으로 마스크를 매집하여 재판매 △생산시설과 판매처 간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이었다.

[표 1-8]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 단속 실적

단속유형	판매업자 등 창고보관	판매량신고 의무 등 고시위반	공무원 현장점검 방해	기타 유통질서 문란행위
검거건수	73	89	5	120
검거인원	159	188	8	333

나. 1차 유행 이후 시기(3.9.~5.6.)

1) 상황전반

신천지 상황 발생 이후 일일 최대 909명(2.29.)까지 발생하였던 신규 확진자는 점차 감소세로 전환되서 3월 10일 이후에는 확진자 수가 100명 내외로 지속되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동시에 국내 해외유입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단계 검역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3월 22일부터 15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됨에 따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대해 15일간(3.22.~4.5.) 운영을 제한하였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며 국내에서도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가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였다.

4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일일 신규확진자는 50명 이내로 감소하였고 4월 19일에는 8명으로 한자리 수준까지 안정화되었다.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를 해제하는 등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 가능한 형태로 실행하기 위해 생활방역을 준비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생활방역 추진계획과 생활방역지침안을 마련하였다.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자가격리자에 대해 별도 방역지침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 사전투표 4.10.~4.11.)가 실시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선언(3.11.) 이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로 66.2%라는 높은 투표율과 감염사례 0건의 성과를 거두어 한국의 선거 대응사례는 해외 각국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구·경북의 대규모 확산을 한 자리수까지 감소시키고, 성공적인 총선을 치러내었으며, 마스크 대란을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등의 대응은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경찰청은 정부 방역 정책의 뒷받침을 위하여 불법행위 수사·역학조사 지원·자가격리자 관리 등 주요 활동을 지속 실시하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신천지 관련 71명을 포함, 356명을 수사하여 이 중 97명을 기소하였다. 마스크 판매사기는 733건·1121명을 검거하여 이 중 116명을 구속하였고 마스크 매점매석은 333건·189명을 검거하였다.

허위사실유포 관련, 38건·26명을 검거하고 개인정보유출 관련해서 7건·21명을 검거하였다. 소재불명자 추적 등 역학조사 지원으로 신천지 관련 956명과 방역당국 및 지자체로부터 요청받은 내국인 994명, 외국인 890명의 소재확인을 완료하였다.

[그림 1-18] 특별 입국절차 지원활동



2) 특별입국절차 지원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현지 날짜 3.11.) 상황과 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 단계 검역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2월 4일 중국발 입국자부터 시행했던 발열체크, 특별검역신고서 작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입국절차를 3월 19일부터 국내의 모든 내 · 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였다.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유럽발 입국자(3.22.~), 미국발 입국자(3.27.~)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하는 등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하였다. 4월 1일부터는 ①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② 국익, 공익 목적의 예외적 사유를 제외한 여행 등 단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후 14일간 시설격리하며, ③ 격리시설 이용 시 비용 징수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경찰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3월 28일부터 인천국제공항 12개소에 경찰관기동대를 배치하여 3층 출국장 입구 출국자 발열확인을 지원하는 한편 무증상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도착 항공편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인솔하는 등 이동을 지원하였다. 또한, 인천과 전국 8개 임시검사시설 간 이동버스 선탑 근무도 지원하였다.

아울러 3월 23일부터 이란 · 유럽 등에서 입국한 무증상 내 · 외국인의 검체검사 결과대기를 위한 임시숙소로 경찰인재개발원을 제공하였다.

3) 자가격리자 이탈 대응 및 불시점검

해외 입국자가 증가하며 자가격리자 증가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3월 26일 중대본은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방안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해외 입국자는 입국시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안전신문고」 앱 및 포털을 통해 주민들의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자가격리 위반 확인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즉시 고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실시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였다.

경찰청도 자가격리 이탈 상황 발생시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력하고 관련 신고 접수시 소재확인 및 엄정수사 등 철저하게 대응하였다.

자가격리자 지정 및 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지자체의 행정명령 발령 후 지자체 요청에 따른 경찰이 행정응원하도록 조치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경찰은 지자체에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경우 공동대응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112종합상황실은 자가격리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자가격리앱 상 이탈로 나오는 경우 신고를 코드0으로 접수하고, 보건공무원의 요청을 받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와 함께 관할 지역경찰을 선출동시켜서 수색을 지령한 후 필요시 형사 · 수사 · 여청수사 등 경찰관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아울러, 자가격리 이탈자가 타 관할로 위치가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공조를 요청하며 필요 시 수배차량 검색시스템도 활용하여 현장경찰관들의 위치파악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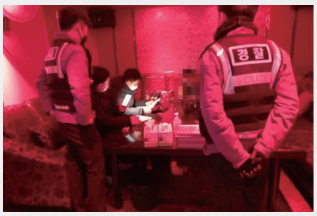
지정장소를 이탈한 자가격리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출동경찰관들은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하였다. 보건공무원 등과 협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충분히 취한 후 귀가 시까지 관찰하여 반드시 격리장소 복귀를 확인하였다.

또한, 격리지역에서 상당히 거리가 있는 타 지역에서 발견되는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한 귀가는 금지하고, 자가격리 대상자 전담 공무원과 협의하여 별도 교통편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아울러 보건공무원의 도착 전 자가격리 이탈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사안이 긴급한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즉시강제 차원에서 격리장소로 우선적으로 강제이동을 시켰다. 강제이동을 거부하면서 경찰관 또는 보건공무원에게 폭언 · 폭행 등 정당한 공무수행에 항거하거나 상습적으로 이탈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도 가능토록 지시하였으나, 실제 현행범 체포 사례는 없었다.

이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 관련한 154건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165명의 자가격리자의 소재를 확인하였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 5,117명 대상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거주지 등 1,389개소에 대한 예방 순찰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자가격리 이탈 관련 141건 · 151명에 대한 소재확인을 하였고 141건 · 149명에 대한 수사를 실시하여 이 중 70건 · 75명을 기소하였다.

[그림 1-19] 다중이용시설 경찰 · 지자체 합동점검



4) 다중이용시설 점검 강화

3월 21일 교회 · 콜센터 등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산발적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 운영 중단을 권고했으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업종별 방역수칙 등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행정명령을 통해 집회 · 집합을 금지시키고 중한 경우에는 시설폐쇄 · 구상권 청구도 병행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 지자체 합동으로 주요 다중이용시설 대상 전 방위적 점검이 실시되었다.

경찰청은 각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지자체장 행정명령 발동 시에는 전 역량을 다해 적극 지원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집단감염 우려 사업장 집중관리 지원 철저 지시(3.19.)'를 통해 지자체에서 실내 집회 금지 · 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 시에는 경찰은 공동대응 개념으로 충분한 경력을 배치,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행정명령 이행토록 경고 · 설득하는 한편 물리적 마찰 차단 및 불법행위 발생 시 사법조치 확행 등 가시적 경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합동점검은 지자체 요청 시 관련 기능(생질 · 수사 · 형사 · 112 · 경비 등)을 중심으로 경찰 ·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풍속행위규제법 · 식품위생법 등 위반 여부를 병행 점검하여 미준수 시 지자체 통보토록 하였다.

경찰청은 3월 22일부터 4월 5일까지(약 2주간) 경찰관 연인원 26,083명을 지원하여 유흥시설 52,377개소, 종교시설 24,991개소, 실내 체육시설 9,765개소, 학원 6,518개소, PC방 13,753개소, 노래방 18,524개소 등 총 125,92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점검, 미준수 시설 10,917개소를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5) 제21대 총선 지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4.15.)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여건 속에 치러지는 사상 초유의 선거로 경찰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 확보를 위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거기간 중(4.2.~4.15.) 단계적 비상근무로 연 16만 4,433명의 경찰관을 선거경비 · 안전활동에 투입하였다.

[표 1-9] 동원경력 : 총 44,310개소, 연 164,433명

구분	거리 유세	대담 · 토론회	인쇄 · 보관소	투표소	투표함 회송	개표소	통합 상황실
개소	3,943	136	3,795	17,830	18,081	251	274
경력	27,943	1,126	12,059	41,914	41,130	12,318	18,648

그간 기능별 독자적인 선거상황관리로 종합적인 대응의 요구가 있었던 만큼 전국 경찰관서에 경비 · 정보 등 관련기능이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구성 · 운영하고 112종합상황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선거 관련 112신고에 공동대응 함으로써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모든 근무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며 선거경비통합상황실 내 좌석간 칸막이 설치, 좌석은 2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생활치료센터 내 특별사전투표소 8개소에 대해 관할서 · 선관위 간 핫라인을 유지하였고 개표 당일에는 선관위와 협업하여 개표소 경비경력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 후 근무하는 등 방역적 상황관리에 앞장선 결과 제21대 총선 경비 · 안전활동을 안전하게 완수할 수 있었다.

6) 생활방역 추진단 구성 ·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도 사회전반의 피로감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생활방역을 준비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경찰은 4월 22일부터 기존 코로나19 경찰재난대책본부 내에 치안상황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경찰청 「생활방역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 생활방역지침에 맞는 경찰 생활방역지침 마련을 준비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대비 경찰 내 생활방역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생활방역추진단 1차 회의(4.22.), 2차 회의(4.28.) 및 3차 회의(5.4.)를 거쳐 각 기능별로 중단되었던 업무 재개시기를 검토하였다. 중수본 지침상 감염위험도(실외 분산 · 이동, 실내 분산 · 이동, 실외 밀집 · 착석, 실내 밀집 · 착석 順) 및 인사혁신처 「공무원복무관리 지침」을 고려하여 중단 또는 일부 중단되었던 50개 경찰사무 중 5월 35개를 재개, 6월 이후 11개 재개, 현행유지 4개 사무로 구분하였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경찰업무 지침' 12종을 마련하여 중대본 31개 세부 지침과 함께 활용하도록 준비하였다.

생활 속 거리 두기 경찰업무지침 12종

① 직장 내 방역지침 ② 마스크착용 ③ 실내교육 ④ 실내행사 · 회의 ⑤ 시험 ⑥ 민원상담
⑦ 실외행사 ⑧ 실외훈련 ⑨ 외근단속 · 점검 ⑩ 차량 소독 ⑪ 경찰박물관 ⑫ 경찰수련원

7) 비접촉 음주감지기 시범운영

[그림 1-20] 비접촉 음주감지기



[그림 1-21] 감지방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도 접촉의 위험성이 있다는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이 논의 중이었고, 경기남부청 광주경찰서 경찰관이 비접촉음주감지기를 개발, 경찰청에 제안하였다.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장비의 성능 · 문제점을 수차례에 걸쳐 시험한 결과 성능의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경기남부청 광주경찰서와 김포경찰서에 보급하여 시범운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한 뒤 비접촉음주감지기를 전국에 확대 보급하였다.

이러한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단속으로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었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자칫 감염병예방으로 음주단속이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도 해결하였다. 시범운영 결과, 총 21명의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였고 시범운영 전보다 음주 교통사고가 58%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다. 이태원 클럽 및 물류센터發 수도권 재확산 시기(5.7.~8.9.)

1) 상황전반

5월 6일부터 일상에서 사회 · 경제 활동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19를 예방하고 방역 활동을 실천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 동참을 당부하였다.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이후 지역 확산을 우려하는 시점에서, 용인시 확진자 1명이 연휴기간(4.30.~5.5.) 동안 강원도, 서울 이태원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고 5월 6일 확진되었다. 이후 이태원 클럽 발 확산으로 불리며 집단 감염으로 이어졌다. 5월말 기준 약 27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1개월 간 전국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였다. 강원 · 전북 · 전남 · 제주 외 13개 시 · 도의 지자체장은 스스로의 권한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5.12. 기준)하였다. 지자체와 경찰은 클럽 등 유흥업소 대상으로 연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5월 23일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최소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여타 물류센터 중심으로 다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6월 1일 기준 집단감염으로 112명이 확진되었다.

5월 28일 기준, 1주간 지역사회 감염자 중 수도권 비중이 약 88%에 달하고 전파속도가 빨라 수도권에 한정하여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17일간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집합제한 대상을 유흥업소 등 유흥시설에서 학원, PC방,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헌팅포차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공공시설 운영중단, 유연근무 활성화, 공공행사 자제 등 공공부문 중심의 강화된 방역조치도 시행하였다.

5월말 발생한 쿠팡 등 물류센터로 인한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관악구 소재 방문판매사업장 '리치웨이' 등 방문판매업체와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주로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지속 발생되었다. 또한, 인구밀집도가 높고 유동 인구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종교 소모임, 동호회, 방문판매, PC방, 학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되는 등 확산세가 계속되었다. 식당 등 음식점, 각종 종교 소모임 및 방문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광주 · 대전 · 전북 등 비수도권 지역까지 코로나19의 전파가 확산되었다.

5월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위해 수도권 고위험시설 대상 집합제한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6월 13일 기준 2주간 위험도 평가에서 5월초 대비 일일 확진자는 18.4명에서 43.6명으로 증가하고 감염경로 불명사례도 7.4%에서 9.2%로 증가였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직전 위험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기존 방역조치를 연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 지역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도 6월 14일까지 시행키로 하였으나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다. 또한 기준 6월 23일 기존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4개를 추가하여 고위험시설을 12개로 재선정하였다. 광주의 경우 종교시설, 방문판매업소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7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운영하였다.

동시에 중대본은 그간 운영되어 온 각 단계 조정기준 및 조치 필요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혼란이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 참여 유도를 위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을 조정하였다.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발생 수준, 유행의 급격한 대규모 확산 가능성 등을 지표로 활용하여 1 · 2 · 3단계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단계 구분은 11월 다시 5단계로 재편되기 전까지 지속 적용되었다.

여름철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해수욕장 대상 방역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준수는 물론 해수욕장 예약제, 혼잡도 신호등제 등 밀집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추진되었다. 추가로 일정 규모이상의 해수욕장은 야간 음주 및 취식행위도 금지되었다.

또한 여름휴가철에 맞추어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 방안도 논의되었다. 하계 휴가기간을 3주 확대(6.29.~9.18.)하여 일 최대 15%이하로 운영토록 각 부처에 권고하였다. 7월말에는 코로나19 대응인력 피로도 완화대책도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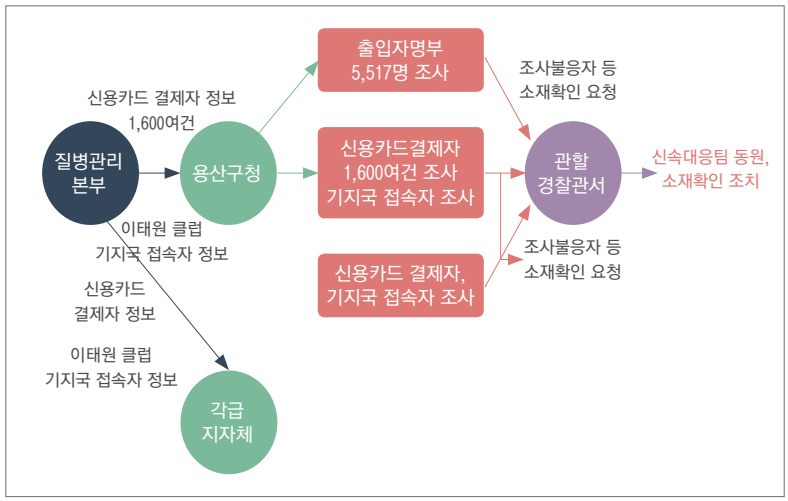
아울러 6월부터 해외입국자 및 확진자 증가 추세에 따라 7월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 기간 내 신속한 방역조치로 인해 전세계 확산 추세에도 1일 확진자 50명 내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 6월경 WHO는 '한국은 확진자 수를 감소시키고,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극찬하였고, UN에서 발표한 인구당 사망자 수, 감염재생산지수, 유행억제 효과성 지표 모두 최상위로 우리나라가 종합지표 1위를 기록하였다.

2) 이태원 클럽 출입자 등 소재확인 및 위치정보 제공

경찰청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 용산구청과 연락하여 소재확인 등 적극 협조 의사를 전달 후 핫라인을 구축하였다. 5월 11일에는 서울 용산서 · 용산구청 간 이태원 클럽 출입자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클럽 출입자 신원확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1-10] 이태원 클럽 출입자 소재확인 업무 로드맵



그러나 클럽 등 유흥업소의 특징상 출입자명부의 신뢰성이 낮고 CCTV를 통한 출입자 확인도 어려워 신속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클럽 내 확보된 명단을 통해 출입자를 선별하였다. 추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여 4월 29일부터 5월 6일 사이에 해당 클럽을 방문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경우까지,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였다.

이후 5월 12일, 질병관리본부 및 용산구청은 이태원 클럽 출입자(4.30.~5.6.) 명부에 기재된 5,517명 중 확진자 · 신용카드 결제자 · 연락 불가자 등 총 5,041명에 대하여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요청을 하였다. 5월 18일 질병관리본부는 1,044명의 위치정보를 추가 요청하여 총 6,085명에 대한 위치정보를 회신 받았다. 이태원 클럽 출입자 소재확인 요청은 6명이 접수되었고, 신속대응팀을 동원하여 CCTV 분석 등을 통해 전원 소재확인이 완료되었다.

3) 5.30. 2020년 제1차 순경공채 필기시험 실시

이태원 클럽 및 물류센터 확진자 관련 코로나19 재확산 시기에도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대책을 수립 · 실시하였고, 5월 30일 순경공채 필기시험에 41,646명이 응시하였으나, 코로나19 감염사례가 없었다.

5월 22일에는 코로나19 관련 자진신고, 예비시험실 운영, 격리대상자에 대한 특별시험 실시, 응시자 행동수칙 등에 대해 응시자들에게 사전 안내하였으며 원서접수 사이트에 '자진신고' 페이지를 운영(5.28.까지)하여 국내외 발생지역 방문이력이나 증상 등을 사전에 파악 · 관리하였다. 또한, 5월 28일에는 이태원 및 물류센터 등 발생지역 관련자와 접촉이력이 있는 응시자는 시험장에 별도 설치된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에 대해 추가로 공지하였다.

5월 27일 질병관리청에서 회신된 격리대상자 중 응시를 희망하는 7명(서울2, 인천5)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임시외출을 요청하였고 5월 30일 시험 당일 치안센터를 활용하여 특별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유증상자(사전신고자 포함) 32명은 시험장에 마련된 별도의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조치하였다.

4)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조치

5월 26일에는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승차 거부를 한시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대중교통 운전자와 승객 간 폭행 등 사건이 잇따라 발생,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방침을 마련하였다.

5.26. 대중교통 관련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 ▶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착용거부 시 승차 거부(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 거부 時 사업 정지 및 과태료 등 면제)
- ▶ 대화 자제, 거리두기, 혼잡 시 다음 차 이용, 기침 시 입과 코 가리기 등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정당하게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하였다. 운전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강력팀에서 전담 수사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여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였다.

한편 운수업체 등 관련 단체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간담회를 통해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침과 112신고 요령 등에 대해 교육 · 홍보하고,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위법사항을 확인하여 형사입건하는 등 협조체계도 강화하였다.

또한 순찰활동 시 지역주민 또는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원들에게 버스 ·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유형에 대해 적극 전파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로 국민들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5)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에 따른 경찰활동 조정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전 1 · 2 · 3차 회의에 이어,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에도 기능별 방역지침 심의 등 생활방역추진단 회의가 계속되었다. 특히 7차 회의 시에는 밀폐도, 밀집도를 기준으로 구성한 '중수본 시설별 위험도 평가기준'을 경찰청 기능별 소관 시설에 적용하여 방역 취약점과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등 언택트 시대에 걸맞은 다양한 치안활동 재개방안이 마련되었다.

첫째, 교육기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교전, 생활 속, 교육 중, 영외활동 중 방역수칙을 마련하였다. 먼저 교육기관별 방역대책을 수립하고 입교전 교육생 대상 예방 수칙 공지, 사전 문진표 작성,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여부 등을 조사한다. 학교 생활 관련 1인 1실을 제공하고, 식당 이용을 시차제로 하며 배식대 칸막이를 설치하였다. 수업 전 발열 체크와 수업중 교수 및 교육생 모두 마스크 착용과 2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였다. 영외활동 중에는 외출 · 외박 전 방역수칙을 교양하고, 유흥시설 및 고위험 장소 방문을 제한토록 하였다.

둘째, 정해진 기간 내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붙여진 경찰부대 교육의 명칭을 '집중교육'에서 '생활방역식 교육훈련'으로 전환하였다. 4주의 교육기간을 10주로 연장하고, 격대(2~3개 중대) 단위 이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제대 · 팀 단위 이하로 분산하여 밀집도를 완화하였다. 또한 교육 방식도 기존 강의식 집체 이론교육은 사이버교육포털 강의를 개별시청하도록 하고, 레크레이션식 팀빌딩 훈련은 거리두기식 팀빌딩훈련으로, 시뮬레이션식 집회대응훈련은 토론식 모의대응훈련과 개인 전술훈련으로 대체하였다.

셋째, 그간 전면 중단했던 공동체 치안 활동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제한적으로 재개하였다. 오랜기간 지역에서 순찰,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활동을 수행해 온 자율방범대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 관련 사항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다.

6) 방문판매사업장 관련 불법행위 수사

6월 6일 기준 서울시 관악구 소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4명 발생하였고, 확진자 34명 중 25명(73%)이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로 확인되었다.

이에 경찰에서는 △지자체 등에 의해 집합 · 출입이 금지된 방문판매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출입한 자△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 · 등록하지 않고 방문판매업체 · 다단계판매업체를 개설 · 관리 · 운영한 자 등 방문판매사업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단속을 실시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방문판매사업장의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 관련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련 첩보 입수 및 고발 접수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다. 방역당국 및 공정위 ·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단속을 통해 경찰은 6월 6일부터 8월 9일까지 방문판매사업장 관련 집합금지 명령 위반 206명, 미신고 방판업체 운영 96명 등 총 56건 307명을 수사하여, 18건 95명을 검거하는 등 방문판매사업장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다.

7) 해수욕장 등 피서지 관련 방역적 경찰활동 강화

[그림 1-22] 해수욕장 방역 활동



7월부터 전국 272개 해수욕장이 개장을 시작하면서 방역대책에 빈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서 7개 지자체(충남 · 강원 · 부산 · 제주 · 경북 · 전남 · 울산)는 해운대 · 경포 해수욕장 등 27개 해수욕장에서 야간(19:00~익일 06:00)시간 대 백사장 내 취식을 금지하는 야간 집합제한 명령을 발령하였다.

경찰은 야간시간대 △경력 지원 △주기적 합동순찰 △거점근무 △교통관리 △우발사태 시 신속출동 등 각 경찰관서 실정에 맞게 해수욕장 및 그 주변의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특히 강원 강릉 경포해수욕장 여름경찰관서 등 16개소는 야간 집합제한 명령 발령 해수욕장으로, △여름경찰관서 방역조치 △지자체 합동순찰 등 방역조치 적극 지원 △피서지 안전 및 범죄예방 활동 강화 등 방역활동에 만전을 기하였다.

또한, 행정명령이 발령된 해수욕장 주변 유흥시설에 대한 지자체 합동점검도 지속 추진하였고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112신고처리 및 순찰 중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에서 방역 관련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도 지자체에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8) 임시생활시설 경비 강화

7월 27일 임시생활시설인 김포 마리나베이 호텔에서 베트남인 3명이 무단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호텔 6층에서 완강기를 이용하여 이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임시생활시설에 야간 근무자 16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였다.

7월 29일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2명을 인천에서, 1명을 경기 광주에서 각각 검거하여 전원 검거하였으며, 방역당국의 고발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강제출국 조치하였다.

경찰은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생활시설별 취약요소를 분석하였다. 임시생활시설은 크게 호텔형 시설과 수련원 · 연수원형 시설로 나눌 수 있다. 호텔형 시설은 대체로 고층 건물이며 소방법에 따라 비상구 폐쇄가 불가하여 객실 또는 복도 완강기를 통해 무단이탈할 수 있었다. 수련원 · 연수원형 시설은 대체로 저층이나 복수건물에 분산 수용 구조이며 테라스를 통해 숙소를 이탈한 후에 경계가 취약한 울타리를 넘어 무단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7월 29일 '임시생활시설 · 생활치료센터 경비 강화 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경찰서에서 임시생활시설 마다 정부합동지원단과 합동으로 취약지점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라 비상구 등 도주 우려 경로에 경찰관을 거점배치하고 외곽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토록 하였다. 그 결과 임시생활시설 18개소에 투입된 인력이 219명에서 255명으로 증원되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통해 정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취약개소에 감지기 또는 CCTV를 추가 설치토록 협조 요청하였다.

또한 수면 및 식사시간 전후 시간에 입소자 재실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였고, 시설 내 근무자는 입소자와 구별이 용이하도록 시인성이 높은 뱃지를 상시 패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임시생활시설 경비 강화 대책은 이후 신설되는 임시생활시설에도 적용되어 임시생활시설의 경비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3. 종교시설·집회 관련 2차 유행 대응 (8~10월)

가. 종교시설 및 집회로 인한 수도권 재확산 시기(8.10.~9.15.)

1) 상황 전반

8월 중순부터 서울 사랑제일교회 및 8 · 15 서울 도심 집회 참가자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그 밖에도 소규모 교회, 방문판매업체, 시장, 학교, 의료기관, 각종 소모임 등 여러 다중이용시설에서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이 이어지는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세가 지속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지속되어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해 8월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였다.

8월 19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모든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예배 실시,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였다. 수도권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타 종교시설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의 교회에서도 정규 예배 · 미사 · 법회는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소모임, 행사, 단체 식사 등은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월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8월 30일

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시에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스터디 카페 등 위험도가 큰 집단에 대해 한 층 더 강화된 방역조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러나 수도권 지역 및 전국적인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국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 20일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조치를 9월 13일까지 연장하였다.

9월 14일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독립적인 총괄기구로서 위상과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어 개청되었다.

2)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그림 1-23]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활동



8월 10일 이후부터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특히, 8 · 15 광복절 집회 참가 인원이 2만 3천여명(경찰 추산)에 달하고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방역당국의 긴급방역대책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급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였다.

이에 경찰은 신속대응팀을 재정비하여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대상자 등 소재확인 요청시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였다. 역학조사 거부 · 회피 및 거짓자료 제출 등 역학조사 방해행위는 감염병예방법(제18조 제3항)을 적용하여 엄정하고 단호하게 사법처리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으로 지자체 등이 역학조사 공조 요청에 비협조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 그 필요성과 지원사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역학조사 협조 요청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였다. 소재확인, 위치정보확인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추적 · 분석 기법을 활용한 감염경로 분석, 인력지원 등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역학조사 거부 · 회피 및 거짓진술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역학조사 방해 관련 유가치 첩보 등을 적극 수집하였다. 조직적 · 대규모 불법행위는 시 · 도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직접 수사하여 면밀한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 사법처리하였다. 주요 검거 사건은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역학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였다.

특히, 8 · 15 광복절 집회 종료 직후 서울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전담수사팀(68명)을 편성, 집회 주최자 ·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에 대해 역학조사 방해,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였다.

이와 같은 단속을 통해 경찰은 한달(8.15.~9.15.) 동안 격리조치 위반 104명, 집합금지 위반 216명, 역학조사 방해 143명, 진단검사 거부 등 기타 위반사항 36명 등 총 578명을 수사하여, 77명을 검거하였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주요 수사사례

- ▶ **(격리조치 위반)** 해외에서 입국하여 2주간 자가격리 통보받았음에도 식당 · 병원 방문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무단이탈한 피의자 구속 송치 (서울 서대문)
- ▶ **(집합금지 위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내 50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7.4. ~ 7.29.)'을 위반하여, 7. 15. 화장품 상품설명회 개최한 방문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 61명 기소 송치 (광주 서부)
- ▶ **(역학조사 방해)** 신천지교회 역학조사에서 신도 일부가 누락된 명단을 제출하는 등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피의자 2명 구속 송치 (대구 지수대)
- ▶ **(기타 위반사항)**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아 병원 입원조치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병원 입원 거부하며 주거지 무단이탈한 피의자 구속 송치 (광주 동부)

3) 허위조작정보 단속 · 수사

6월 들어 소규모로 축소된 코로나19 확산세는 8월 10일 기준으로 증가세로 변화되었고, 특히 허위사실유포 · 개인정보유출은 8 · 15 광복절 집회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에 사이버 상황대책실은 全 시 · 도경찰청을 대상으로 △ 시 · 도경찰청 모니터링 결과 및 상황보고를 매일 2회(07시 · 16시) 본청 모니터링 담당자 및 사이버안전국 당직팀에게 보고 △적극적인 모니터링 독려를 위해 시 · 도경찰청은 발견한 허위사실만을 보고토록 하고 내 · 수사 등 대응은 본청에서 일괄 검토 등의 내용을 업무연락으로 하달하였다. 또한 본청 모니터링 담당자를 1명 지정하여 해당 업무를 전종하도록 조치하는 등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유포 및 개인정보유출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응 태세를 정비하였다.

이렇게 신속히 대응 태세를 갖추어 모니터링한 결과 8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게시자 상대 자진삭제 요청 2건, △게시 사이트 대상 삭제 · 차단 요청 177건, △방심위 상대 삭제 · 차단 심의요청 26건 등 총 205건의 삭제 · 차단 요청을 하였다.

아울러 경찰은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의 그간 단속 현황, 엄정 대응 의지, 주요 진행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에 수사관을 재차 파견(2차 9.7.~)하였다.

4)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지원

종교시설 및 대규모 집회 이후로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코로나19 경증환자(무증상 포함)를 격리시켜 생활 및 치료를 지원하는 생활치료센터 확보가 필요하였다. 이에 경찰은 대전 · 충남지역의 경증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경찰인재개발원 생활관을 9월 7일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확진자(무증상 · 경증) 치료와 감염 확산 방지에 일조하였다.

경찰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는 대전시 총괄 하에 7개 기관, 5개 반, 5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이 운영하였다. 경찰인재개발원 생활관 1~5동(562실)을 사용 중이며 대전 · 충남지역 경증환자 9명(총 58명 입소, 49명 퇴소) 입소하였다('20.10.18. 기준). 경찰은 입소자에 대한 침구류, 난방 · 온수 공급 등 생활지원 뿐만 아니라 5생활관을 정부합동지원단 사무공간으로 마련하였다.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 2명, 외부질서 유지를 위해 4명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인원은 무증상 확진자로 경찰인재개발원 직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였다. 원내 소독(1주 2회) 및 체온측정 강화, 방역수칙 준수, 생활관 주변(약700m) 출입통제선 및 경고판을 설치하였고 입소자 이동경로를 구분, 바리케이트 및 안내판을 설치하였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 시차출퇴근 · 휴가등을 활용하여 밀집 ·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24시간 지원 · 방호체제 유지를 위해 경찰인재개발원 본관 1층 당직실에 재난상황실을 설치 · 운영하며, △정부합동지원단과 핫라인 구축 △비상연락체계 유지 △입소자 소란 · 무단이탈 등 상황 발생시 초동조치상황보고 · 통보 △입소자 현황 보고 △생활관 시설 · 장비 원격지원 등의 업무를 실시하였다.

5)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발령에 따른 112신고대응 강화

경찰청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112신고 시 조치사항을 전국의 112종합상황실에 하달하였다.

112신고 접수 시 대응 요령

① **지자체의 현장점검 및 행정지도 관련 경찰 참여 요청 시**
– 긴급성 등 감안 출동 인원 판단 후 지자체 공무원과 동행하여 경고 · 설득, 불법행위 엄정 대응 및 사후 사법조치 확행

② **금지 또는 제한된 실내집회 · 영업 강행 112신고 접수 시**
– 지자체 신속 통보 및 출동 인원 판단 후 지자체 공무원과 현장 출동하여 추가 집결 차단 및 경고 · 설득, 행정명령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시 사후 사법조치 확행

③ **현장 점검 지자체 공무원 등 폭행 112신고 접수 시**
– 코드0 접수, 가용경력 출동 후 폭행행위에 대해 현행범체포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사후 사법조치 확행

④ **지역 순찰 중 행정명령 위반 인지 시**
– 대상시설 대상 경고 · 설득 후 상황실 통보, 지자체 출동 요청하여 위반 사실 확인 후 행정명령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시 사후 사법조치 확행

지자체 등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현장점검 · 시설 폐쇄 등 조치 시 경찰은 '공동대응' 개념의 적극적인 '행정응원'을 실시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충분한 경력을 배치하여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행정명령을 이행토록 경고 · 설득하는 한편, 물리적 마찰 및 공무원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상 실내집회 등 제한 · 금지는 복지부와 지자체의 권한이며 경찰 단독으로 금지 · 해산 등 강제조치는 곤란하므로, 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고 112신고 등 국민들의 민원제기 시 방역적 치안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6)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회 · 시위 대응 강화

8 · 15 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중대본은 8월 19일부터 서울 · 경기 · 인천에서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였고, 8월 23일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적용함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

든 사적 · 공적 목적의 집합 · 모임 · 행사 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되고 '100인 이상 집회 · 시위'가 금지되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를 전면금지하였다.

[그림 1-24] 페이스쉴드 착용사진 (밴드형)



[그림 1-25] 페이스쉴드 착용사진 (안경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에 8월 22일 경찰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지침을 마련하였다. 먼저, 집회 신고단계에서는 집합금지 기준(서울 10인 · 여타 지역 100인)을 넘는 인원이 참여하는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 하였다. 집회가 개최될 경우 집회 규모 · 양태 · 참석자의 특성 등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결차단 · 해산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다. 금지 대상이 아닌 집회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현장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우선 대화경찰이 집행부를 상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 · 경고하되,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나. 2차 유행 이후 시기(9.16.~11.17.)

1) 상황 전반

정부는 추석 연휴 · 개천절 ·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 기간인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의 특별방역 기간을 지정하였다. 명절 이동량 제한을 위한 특별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명절 연휴 때마다 면제해 왔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추석 연휴 사흘간(9.30.~10.2.) 유료로 전환했다.

10월 3일 불허된 개천절 집회를 앞두고 국무총리는 경찰 · 지자체 · 유관부처 · 단체가 협업하여 엄정 대응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경찰청은 단체별 집회 · 차량시위 등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여 전파하고, 방역당국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총력 대응하였다. 또한 광화문 광장 주변 등 다중이 운집 가능한 장소에 경력과 장비를 선점 배치하여 집결을 제지 · 차단하고, 불법 양태에 따라 해산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다. 허용된 차량시위의 경우, 법

원의 결정 내용대로 엄격하게 관리하여 조건 위반 시에는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미신고 및 금지된 차량 시위는 차단 · 해산절차 진행 등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10월 5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에서 군부대 집담감염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포천 지역 내 모든 부대에 대해 외출통제령을 내려 포천 지역 부대의 전 인원은 통제령이 해제될 때까지 휴가를 포함한 일체의 외부 출입이 금지되었다. 10월 중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였으나,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1월,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대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하고 정밀한 방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고 발표, 11월 7일부터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하였다.

[표 1-11] 개선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구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핵심 지표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 · 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 · 제주는 10명 이상)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1.5단계 기준2배 이상 증가 ②2개 이상 권역 1.5단계 유행 지속 ③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 강원, 전남, 광주,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또한 중대본은 수능과 연말연시 등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2)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운영(9.28.~10.11.)

중대본은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여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9.25.)하였다. 확진자 수는 감소 중이나, 잠복감염의 가능성이나 사회적 수용성 저하 등을 고려할 때 추석 특별방역 2주간의 방역 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거리두기 2단계 중 집합 · 모임 금지 등 핵심 조치는 유지하되, 수도권은 외식과 문화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 ·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석 연휴 특별 복무관리(경무), 유흥시설 관계부처 합동점검(생활질서) 등 각 기능별 추석 연휴 경찰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의 방침을 지원하였다.

-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방안(치안상황)
- ▶ 추석 연휴 특별 복무관리 지침(경무)
- ▶ 추석 연휴 유흥시설 대상 관계부처 합동점검(생활안전)
- ▶ 추석 연휴 허위조작 정보 등 단속 대책(사이버)
- ▶ 연휴 중 집단감염 대비 역학조사 지원대책(수사)
- ▶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인원 밀집시 대응방안(교통)
- ▶ 연휴 중 의경 영외활동 방역대책(경비)
- ▶ 추석 연휴 집회 · 시위 등 대응 방안(정보)
- ▶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활동 추진(감사)

3) 개천절 등 집회관리(10.3.~10.10)

10월 3일에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었다. 중앙재난대책본부는 경찰에 접수된 291건의 서울 시내 집회 신고 중, 78건의 10인 이상 또는 금지 구역 내 집회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개천절을 보름 앞두고 서울경찰청은 개천절 집회신고 101건과 한글날 집회신고 15건을 모두 반려했으며,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행정명령의 유효기간을 10월 11일까지 연장했다.

집회가 예고된 10월 3일 경찰은 시 경계, 한강 교각 27개소, 도심권에 3개 종대로 95개 가량의 검문소를 설치하고 보행자 및 도심 진입 차량을 통제했다. 아울러 광화문 광장, 세종로 로타리, 서울광장 등 대규모 인원 운집이 가능한 지역을 경찰관과 경찰버스로 차단하여 집회 인원이 운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에 집회를 개최하는데 실패한 주최측(8.15 비대위)은 10월 9일 한글날과 그 다음날인 10월 10일에 또 다시 집회를 계획하고, 대규모 형식이 아닌 산발적 기자회견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10월 9일 주요 집회 예정 장소 등에 대한 차단조치가 이루어졌으나, 개천절 집회 때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었으며, 경찰은 차단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였다. 10월 10일에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집회가 이어졌다. 대규모로 계획되었던 집회는 이러한 경찰의 대응으로 드라이브 스루 집회, 1인 시위 등 소규모, 산발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5단계 경찰업무 조정(11.6.)

중대본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에 따라, 경찰청은 17 · 18차 생활방역추진단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지속 가능하고 정밀한 방역체계 구축을 목표로 경찰업무 조정계획을 수립 · 시행하였다.

먼저 단계별 비상근무 발령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재난관리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감염병 확산세 및 위험도에 따라 회의 · 행사 · 교육훈련 · 출장 등 14개 업무의 단계별 세부기준을 5단계로 정밀화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경찰 외근활동, 의경 영외활동 등 기능별 19개 업무에 대해서도 5단계에 맞춰 조정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With 코로나'에 대비하여 단계별 직원복지시설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방역 · 일상 · 업무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표 1-12]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5단계 경찰업무조정 주요 내용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역 유행 단계</th></tr>
<tr><th>1.5단계</th><th>2단계</th></tr>
<tr><td rowspan="4">경무(공통)</td><td rowspan="2">중대본 회의</td><td rowspan="2">(총리주재) 청장 참석, 차장 · 국관 배석
(장관주재) 차장 참석, 주무과장 배석
(차관주재) 치안상황관리관 참석</td><td rowspan="2">(총리주재) 청장 참석, 국관(1/2) 배석
(장관주재) 차장 참석, 과장(1/2) 배석
(차관주재) 치안상황관리관 참석, 주무계장(1/2) 배석</td></tr>
<tr></tr>
<tr><td rowspan="2">비상근무</td><td colspan="2">해당권역 '경계강화'</td></tr>
<tr><td>관서장 판단</td><td>필수 시행</td></tr>
<tr><td></td><td>행사</td><td>축제 등 일부 행사 100인 이상 금지</td><td>모든 행사 100인 이상 금지</td></tr>
</table>

구분		지역 유행 단계	
		1.5단계	2단계
경무(공통)	직장교육	지역별 확산 추세 고려하여 실시 여부 판단	사이버 훈련으로 대체 · 운영
	경찰수련원	50% 인원 제한	30% 인원 제한
	목욕시설	인원 제한(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면적 8㎡당 1명)
	헬스장	문체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준수 조건부 운영가능	운영중단
	구내식당/카페	시설면적 50㎡ 이상인 경우 방역조치 의무화	2인 이상 매장 내 1시간 제한(카페)
	경찰대학/중앙학교	교육기관 소재지 內 외출 · 외박 시행	교육기관 소재지 內 외출만 시행
치안상황	외근활동	밀접(직접)접촉 자제	홍보 · 조사 · 단속 등 대민접촉 자제
	근무인수인계	팀장 및 필수인원 참석	팀장 간 제한적 실시
	지역안전순찰	방역지침 준수, 실외활동 위주	다중시설 출입 등 자제 지역치안문제 발굴 · 해결에 주력
사이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4m2당 1명, 최대 100명	4m2당 1명, 최대 50명
교통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중단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점검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중단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제한적 시행	중단
경비	경찰부대 교육	중대단위 허용	중대단위 허용
	의경 영외활동	허용	외출 · 면회 제한, 외박 · 휴가 허용
외사	다문화 치안활동	정상운영	50인 이상 금지
	국제교류 초청행사	정상운영	100인 이상 금지

4. 수도권 중심 3차 유행 대응(11~12월)

가. 상황 전반

11월 20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 누적 확진자가 3만 명, 사망자가 500명을 넘으면서 방역 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차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정부는 각종 회식 · 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2단계 기준 충족시에는 2단계 조기 격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3차 대유행의 시작은 특별한 대형 집단감염 사례는 없었으나, 직접적 원인을 알 수 없는 불특정 집단에서 집단감염이 일어났다. 감염경로가 파악이 안되는 확진자가 늘어 서울시와 자치구는 역학조사 인원을 확충하는 등 대응에 나섰음에도 감염경로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방역조치가 섣불리 완화되면서 시민들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이 3차 대유행의 주원인이라고 보았다. 대한감염학회를 비롯한 전문학술단체들은 효과적인 조치 없이 1~2주가 경과하면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니 선제적인 방역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전했으며, 최근 사회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이 많이 낮아져있고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결국 11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였다. 정부는 11월 28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으며, 서울시 등은 신고 인원이 10명 이상인 집회는 모두 불허,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통지했다.

12월 4일 신규 확진자는 629명으로, 3월 이후 276일 만에 600명을 넘기며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국내 유입된 이래 가장 큰 위기라며, 현재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확산세가 늘어나자, 정부는 12월 8일 수도권 전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비수도권 전역 2단계로 격상하였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급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수도권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군, 경찰, 공무원 행정인력 800여 명이 수도권 지역 보건소에 투입되었다.

12월 중순,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나왔으며, 수도권에서는 580명의 환자가 병상이 없어 자택에서 대기하였다. 격리 중인 환자 수는 △1차 대유행 때 정점인 7,470명, △2차 대유행 때 정점인 4,786명을 뛰어넘는 1만 372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2월 25일, 신규 확진자는 1,241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200명대를 돌파했다. 수도권은 △서울 550명 △경기 257명 △인천 55명 총 871명으로, 서울 역시 최다 기록이었다. 최근 1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005.9명으로, 이는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의 상한선인 일평균 1,000명마저 초과하였다. 수도권은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5인 이상의 사적인 모임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12월 29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233명) 발생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했다.(12.31.) 교정시설 직원들은 전원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 비상근무와 관련 없는 외부 활동이 전면 금지되었다. 수용자는 모든 형태의 대면 접견이 일체 금지되었으며, 교정시설 내 작업과 교육 등 수용자 관련 활동도 전면 중단되었다.

나.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한 방역적 경찰활동 추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 되면서 11월 24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은 '자가격리 이탈자 대응을 위한 방역적 경찰활동 추진계획'을 수립, 지자체 등 방역당국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등 이탈자 관리를 강화하였다. 지자체 등 보건당국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의로 공동대응 및 협력필요 사안을 논의하여, 행정응원 요청 시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연락두절 등 신고 접수 시에는 주소지 관할 지구대 · 파출소에서 1차로 신속하게 자가격리 대상자 소재를 파악, 2차로 형사 · 수사 · 여청수사 등으로 구성된 신속대응팀을 추가지원 하는 등 자가격리 이탈신고 접수시 적극 대응하도록 하였다. 또한, 방역적 예방순찰의 일환으로 지자체의 행정응원 요

청이 없는 경우에도 외근활동 중 방역수칙 위반 또는 자가격리자 이탈 관련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지자체 통보하고 추가지원 등 적극 조치하도록 하였다.

다. 경찰관서 방역 현황 일제 점검(11.19.~11.25.)

수도권 · 강원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경찰청은 지역 확산세를 고려하여 '전국 경찰관서 방역대비 현황 점검 계획'을 마련하였다.

먼저 전 시 · 도경찰청 · 경찰서 및 부속기관 포함 280개 관서에서는 관서별 방역대책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또한 제7차 생활방역추진단 회의(6.4.)에서 수립한「각 기능별 소관 시설 위험도 평가 및 방역대책」을 참고하여 현재 운영 중인 경찰관서의 소관 시설을 치안종합상황실 · 182콜센터 등의 고 · 중위험시설과 경찰교육기관 · 경찰부대 · 민원실 · 유치장 · 기자실 등 불특정 다수 방문 · 이용시설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소관 기능별 전수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설별 밀집도를 완화하고,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방역체계를 재확립하였다.

라. 수도권 역학조사 지원 1차(12.14.~)

[그림 1-26] 역학조사 지원



12월 13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선제적 방역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경찰과 군에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역학조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신임경찰 제303기 632명이 실습기간 중 역학조사 지원을 위해 수도권 81개 보건소에 투입되었다. 12월 14일 질병관리청 주관 사전교육 후, 바로 시군구별 보건소에 배치되어 역학조사 정보입력 및 관리, 대상자 통보, 역학조사 지원, 검체 이송 등의 근무를 지원하였다.

경찰청은 각 경찰서 현장실습 담당 및 시 · 도경찰청 112 재난담당과 동원된 신임경찰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동원된 신임경찰관들의 복무관리 등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12월 23일 동절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중인 신임경찰관의 사기 진작 및 건강관리를 위해 방한패딩을 구매 · 지급하였다.

마. 경찰병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개시(12.30.)

중수본의 경찰병원 동원(병상 확보) 명령으로 46병상을 우선적으로 운영하되, 환자 입원상황 등에 따라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다. △환자 전원 · 퇴원 조치 △시설 개선 · 장비 구비 △서울의료원 벤치마킹(旣 전담병원 운영중) △방호복 착 · 탈의 교육 및 감염환자 관리방안 숙지 등 계획에 따라 준비하여 개시하였다.

[표 1-13] 경찰병원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조치 필요	조치완료
환자 전원	- 입원환자 135명 퇴원(87명) 및 전원(총 48명, 이 중 감염환자는 퇴직 4명) - 전원 대상자 중 감면대상(경찰, 의경, 퇴직경찰) 의료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관련 예산 확보하기로 협의(기재부에 예비비 신청 完)
시설 공사	- (음압설비) 이동형음압기(65대), 차압칸막이(55개) 등 필수 설비구비 - (공조시설) 층간 환기구 차단, 층간 분리(감염 전담병동-일반병동) 完 - (기타시설) CCTV(85대), 자동문(6개) 등 설치
장비 구비	- (환자 진료) 최대 71병상 기준 운영을 전제, 병실별 필요장비 구비 ※산소포화도 측정기(71대), 혈압계(71대) 등 - (의료진 보호) 호흡기 보호구, 보호복, 마스크 등 구비 ※호흡기보호구 5대, 레벨D보호복 2,000세트, 마스크 15,000개

바. 연말·연시 대비 유흥시설 특별점검(12.18~12.31.)

연말 · 연시 모임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주점 등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추진하였다. 부처간 가용경력을 총동원한 선제적 · 적극적 점검으로, △무허가 업소 △위반업소 재영업 △점검을 피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 △영업 제한시간 초과 영업 △점검을 피해 주간 시간대 영업 △다른 장소를 빌려 영업 등 점검의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면밀히 점검하였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 후 주택가 장소를 빌려서 불법

영업하는 사례 등 적극 적발 · 단속하였다.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이 철저히 이루어졌다.

▶ **기간** : '20.12.18.(금) ~ 12.31.(목)
▶ **대상**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PC방
▶ **행정명령 현황**
– 〈수도권〉 12.8.~28.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유흥시설 및 노래연습장 운영 중단, PC방은 운영 제한(21시 이후 운영 중단)
– 〈비수도권〉 12.8.~28.(3주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 · PC방은 운영 제한(21시 이후 운영 중단)
※ 지역별 편차 고려, 청정지역의 경우 지자체 자율적으로 하향 가능
▶ **점검실적** : 19,420개소 점검, 39건 단속 (경찰 2,466명 지원)

사.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호송 지원(12.28.)

[그림 1-27] 서울 동부 구치소 수용자 호송 지원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185명이 12월 19일 하루에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4일 288명, 28일 233명, 12월 31일에는 누적 확진자 918명을 기록했다. 교정시설은 개방된 환경이 존재하지 않아 인구밀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밀접접촉이 자주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대규모 집단감염 사태에 법무부는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발령하고, 교정시설 직원들은 전원 비상 근무체계에 들어갔다. 또한 확진자의 치료를 위해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고, 이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도주 등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 경호경비를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수용자 호송 지원 계획을 수립 · 시행하였다. 경비 · 교통 · 수사 등 관련 기능과 서울 · 경북 등 관할 · 경유 시 · 도경찰청에서는 계획에 따라 호송간 안전을 확보하였다. 기동대 5개 중대, 고순대 순찰차 49대, 형사 120명 등 총 220명이 동원되었다.

▶ **호송일시 :** '20.12.28.(월) 09:00~15:00

▶ **호송경로 :** 서울동부구치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경북 청송)

▶ **호송인원 · 방법 :** 353명(4개 조), 조별(버스 5대) 1시간 간격 출발
※ 교정인력 : 무장교도관 등 120명, 호송버스 19대

▶ **대응체계 :** △ 이동 간 교통안전(교통) △출발 · 도착지 안전확보 및 이동 중 돌발대비 경력지원(정보 · 경비) △탈주시 검거 대비(수사) 등 관련기능 협업 체계 구축